



석달 남겨놓고 이제야 부랴부랴

도, 2019년도 민자유치 추진계획안 하반기에야 의결 추진목표 달라져… 도 “부득이 연기… 노력 기울일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을 석달 앞두고 2019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날 2019년도 제주도 민자유치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문제는 의결 시기다. 민자유치 추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유치활동 방안과 민자유치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올해 민자유치 추진계획이

뒤늦게 추진되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 민자유치 추진 계획이 3월에 의결, 추진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4월쯤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간 일정 조율이 어려웠고, 임기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3개년 계획이 마련돼 의결되는 것”이라며 “작년에 수립된 계획(2018~2020)을 토대로 2019년도 계획(2019~2021)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계획안은 지난해의 업그레이드 수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실제 2018년 계획과 2019년 계획을 비교하면, 추진 목표가

크게 달라져 있다.

2018년 계획에 담긴 관광숙박·휴양펜션 투자유치 분야가 2019년도 계획안에선 삭제됐다. 또 2018년 계획에 없던 전기차 분야 투자유치 계획이 2019년 계획안에 신설됐다.

이는 민자 투자유치 예산 계획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8년 계획에서 2019년 예산은 3조5392억원이 제시됐지만, 2019년 계획안에서는 1조8818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결국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계획에서 관광숙박·휴양펜션 분야가 삭제된 것은 공급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늦었지만 관광인프라 중심 투자유치를 지양하고 미래 잠재력을 고려한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목표도 정책을 전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국회로 간 예결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도의원들, 강창일 의원 면담 인사권 독립·자치권 확대 등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를 방문해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1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송영훈 위원장은 강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이 전해속 행정안전위원회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뤄지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2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또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설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 위원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30년 만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 설계이자 자치단체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항”이라며 “4차 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번 전부개정은 필수적이며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방자치법 통과에 공감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인 1일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항에 어선들이 피항해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 태풍 ‘미탁’ 대비 총력 재해위험지역·저류지 등 점검

원 지사 “선제적 대응 준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1일 오전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해안가, 태양광 시설 등 지난 태풍 피해 발생 지역과 재해위험지·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예찰활동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점검했다.

도는 이와함께 응급복구장비 및 방해물자(굴삭기 등 장비 400대, 수방자재 12만3000점)를 재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내 저류지 25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현수막(게시대 257개소)을 철거하고 공사장 자재 정비, 비닐하우스·농축산시설·어선 등 결박조치와, 배수로 정비, 대규모 정전피해 최소화, 범람 우려지역에 대한 주차차량 이동 조

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농작물 관리요령을 통보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복구계획을 마련 중이다.

회의를 주재한 원희룡 지사는 “태풍 영향권에 노출되는 2일과 3일에 걸쳐 도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 1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태세에 돌입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연이은 비 날씨와 태풍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피해 최소화과 향후 복구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행안위, 4·3특별법 등 질의

2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점검한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 다양한 제주 현안을 살펴봤다. 올해는 행안위 소속 제주지역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제주 현안들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다.

행안위는 오는 4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벌이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고유정의 전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 등이 도마에 오를 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감에 입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경제, 평화, 개혁 등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반에 관한 총체적 실패, 내치와 외교에 있어서 무능상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태풍에 각종 행사 축소·연기

제주시가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에 따라 각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를 축소해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4회째 맞는 제주음식박람회는 '탐라순미도 영주심미'를 주제로 정주 식재료를 활용해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10가지 맛의 특별한 선물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또 태풍 영향으로 2일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2일 예정된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 등을 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장소는 한라체육관에서 애항운동장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제주개발공사가 다가족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01)현재 사업대상지역(제주시,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입주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JH중복신청불가)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접수기간
- 제주시: '19.10.10(목) ~ '19.10.11(금)
- 서귀포시: '19.10.14(월) ~ '19.10.16(수)

■ 모집세대
- 제주시: 288세대, 서귀포시: 337세대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수준

■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780-3592, 3593, 359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LTD.

태양광 바로알기 허위과장사칭 광고 사례 및 대응방안

우리집에 태양광을
공파로 설치해 준다던데 진짜인가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연령층 대상으로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는
허위광고 사례

정보부조금 사업에도
소비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정부사업을 하는 업체가 맞나요?

무자격업체가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등)
명의를 도용하여 민간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는사업인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종합
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064-748-4695)

☑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접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사)한국부민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6회 제주시남원읍민회 한마음 축제

결실의 계절에 ‘으뜸 남원’의 자부심을 펼치는 「제6회 제주시남원읍민회 한마음 축제」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읍민회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향우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19년 10월 6일(일요일) 09:00 ~ 16:00 (개회식 10:00)
- 장 소 : 제주대학교 체육관
- 참 석 : 11개 향우회 및 회원가족
- 팀구성 : 4개팀(향우회별)으로 구성
- 연락처 : 사무처장 현왕식 (010-4696-1554)

제주시남원읍민회 제6기 임원명단

역 대 회 장 초대회장 김명림, 2대회장 양만식, 3대회장 김문남, 4대회장 고성국, 직전회장 안영신

남원읍민회 회장 현규철

고 문 양영수, 문대준, 현학송, 김형수, 오승언, 김경욱

자 문 위 원 양일중, 김봉현, 현순명, 김형중, 현길호, 양찬석, 양관일, 김상을

향우회장단 양진웅(남원), 양만권(태흥), 오순철(신희1), 김영민(신희2), 양상배(의귀), 현용우(수망)

김창호(한남), 안성홍(위미), 양권형(신희1), 오명취(신희2), 김현숙(하례)

수석부회장 양진웅

부 회 장 강옥선, 현학수, 현홍민, 고병욱, 강창남, 양찬익, 이택관, 오병익, 김동후, 김은배, 고권진

감 사 강승호, 김길찬

제주시남원읍민회장 현 규 철